

디지털자산

8 월: 디지털자산 정책 인사이드

7월에는 미국·일본·유럽·영국을 중심으로 발행·거래·결제 체계 정비와 토큰화 금융시장 구축이 구체화됐습니다. SEC 헤스터 퍼스 위원은 온체인 볼트와 대출 서비스에 기존 증권법 적용 원칙을 구체화하며, 향후 관련 서비스의 규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연내 미국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처리 여부와 국내 가상자산 과세 세부기준 마련이 주요 정책 변수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DIGITAL ASSET

| Contents |

핵심요약	03
I. 7월 국내외 정책 동향	05
1. 미국: 상원, 클래리티 법안 상원 수정안 공개	07
2. 유럽: ECB, 디지털 유로 시범사업 참여사 36곳 선정	08
3. 영국: 토큰화 로드맵 & 산업 태스크포스 출범	09
4.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개정법 성립·공포	11
5. 한국: 금융위·한은, 예금토큰 실증 확대	12
II. Key Issue	14
1. SEC 헤스터 퍼스, 볼트·대출 증권법 적용 가능성 제시	15
2. 전망	16
III. 8월 주요 일정	17
1. 8월 주요 이슈 전망: 국내	19
2. 8월 주요 이슈 전망: 해외	21

핵심 요약

7월 해외 리뷰:
디지털자산
제도권 편입 가속

7월 글로벌 디지털자산 정책은 디지털자산을 기존 금융규제 체계에 편입하고, 발행·거래·결제 인프라를 제도권 금융시장과 연결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됐다. 미국은 상원 수정안을 통해 디지털자산 분류체계와 SEC·CFTC 관할 기준을 전면 재설계하며 공시·거래·소·토큰화 증권 규제를 포괄하는 통합 법체계를 제시했고, 일본은 암호자산을 금융상품 거래법 체계로 편입해 공시와 내부자거래 규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화를 추진했다. 유럽은 디지털 유로 파일럿에 36개 민간 결제서비스제공자(PSP)를 선정해 입법과 기술 검증을 병행하며 중앙은행과 민간 금융권의 역할 분담을 구체화했고, 영국은 토큰화 시장 로드맵과 산업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담보·결제·유통시장 등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7월 국내 리뷰:
금융위·한은, 예금토큰 실증
확대 및 국제 연계 검증

금융위원회는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시행을 위해 예금토큰 지급결제 테스트 범위를 확대하고 송금·국고금 집행 등 신규 기능을 추가했다. 한국은행은 BIS 프로젝트 아고라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토큰화 지급준비금 기반 국가 간 지급결제를 검증하고, 향후 한강 플랫폼과의 연계 및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현 단계는 규제 샌드박스 기반의 실증사업으로, 예금토큰의 법적 성격, 상시 서비스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 프로젝트 아고라의 상용화 일정은 모두 향후 정책 결정에 따라 구체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Key Issue:
SEC 헤스터 퍼스, 온체인
볼트·대출의 증권법 적용
가능성 제시

SEC 헤스터 퍼스(Hester M. Peirce) 위원은 온체인 볼트(vault)와 대출 서비스도 기존 연방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핵심 판단 기준은 스마트컨트랙트 자체가 아니라 운용 재량(discretion)의 존재 여부라고 밝혔다. 수익 전략 선정, 자산 재배분, 금리 및 담보인정비율(LTV) 설정 등 운용 의사결정에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 투자계약, 투자회사법, 투자자문업 규제 등이 적용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성명은 기존 증권법 적용 원칙을 온체인 수익형 서비스에 적용한 것으로, 향후 볼트와 온체인 대출에 대한 SEC의 법 해석 방향을 보여주는 성명으로 평가된다. 특히 프로토콜 자체보다 운용 주체와 운용 방식에 대한 증권법 적용 여부 검토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관 대상 온체인 수익형 서비스의 설계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전망:
국내 과세 시행 준비와
미국 규제 입법 향방 주목

7월 글로벌 디지털자산 정책은 디지털자산을 기존 금융규제 체계에 편입하고, 발행·거래·결제 인프라를 제도권 금융시장과 연결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됐다. 미국은 상원 수정안을 통해 디지털자산 분류체계와 SEC·CFTC 관할 기준을 전면 재설계하며 공시·거래·소·토큰화 증권 규제를 포괄하는 통합 법체계를 제시했고, 일본은 암호자산을 금융상품 거래법 체계로 편입해 공시와 내부자거래 규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화를 추진했다. 유럽은 디지털 유로 파일럿에 36개 민간 결제서비스제공자(PSP)를 선정해 입법과 기술 검증을 병행하며 중앙은행과 민간 금융권의 역할 분담을 구체화했고, 영국은 토큰화 시장 로드맵과 산업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담보·결제·유통시장 등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8월 전망:
국내 과세 시행 준비와
미국 규제 입법 향방 주목

국내에서는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고,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거래 유형별 취득가액 산정과 세부 과세기준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본회의 처리 여부가 최대 변수로, 민주당과의 협상 결과와 윤리 조항 등 주요 쟁점의 조정 여부가 연내 상원 처리 가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본 페이지는 편집상 공백 페이지입니다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I

7월 국내외 정책 동향

[표1] 7월 디지털자산 정책 동향

국가	날짜	정책 및 법안	진행 단계	내용
미국	2026.07.07	SEC, 2026년 규제외제 공개	규제외제 포함	디지털자산 관련 5개 규제안 포함. ①디지털자산 발행·유통 규정(Crypto Assets, 3235-AN38), ②수탁 규정 개정안(Amendments to the Custody Rules, 3235-AN46), ③브로커딜러의 재무책임·기록보관·보고 규정 개정안(Amendments to Broker-Dealer Financial Responsibility and Recordkeeping and Reporting Rules Regarding Crypto Assets, 3235-AN48), ④디지털자산의 거래소·ATS 거래를 다루는 시장구조 개정안(Crypto Market Structure Amendments, 3235-AN49), ⑤명의개서대리인의 디지털자산 및 분산원장기술(DLT) 활용을 반영한 규정 개정안(Transfer Agents, 3235-AL55)으로 구성
	2026.07.22	클래리티 법안 상원 수정안 공개	수정안 공개	상원 은행위원회안과 농업위원회안을 합친 상원 수정안을 공개. CFTC의 디지털상품 현물시장 감독, 투자자보호, 법집행, 공직자 윤리, 시행시기 등을 반영
	2026.07.22	헤스터 퍼스 SEC 위원, 볼트-온체인 대출 관련 성명	위원 성명 발표	볼트와 온체인 대출 서비스도 구조에 따라 연방 증권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 투자계약·투자회사·채무증권·투자자문 등 네 가지 검토 경로를 제시
EU	2026.07.01	MiCA 전환기간 종료	시행 완료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미인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CASP)에 신규 고객 유치와 마케팅을 중단하고 기존 영업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도록 요구
	2026.07.14	유럽중앙은행, 디지털 유로 파일럿 참여사 선정	참여자 선정	유럽중앙은행(ECB)이 결제서비스제공자(PSP) 36곳을 선정. 2027년 하반기부터 12개월간 통제된 시험환경에서 기능과 운영 절차, 사용자 경험을 검증할 예정
영국	2026.07.13	영국 재무부, 홀세일 금융 토근화 로드맵 공개	보고서 공개	영국 재무부(HM Treasury)는 9개 실무그룹을 구성해 홀세일 금융 토근화 과제를 추진. 분산원장기술(DLT) 도입과 시장 인프라 간 상호운용성 제고가 주요 과제
	2026.07.13	영국 국세청, 가상자산 대여·유통성 풀 과세안 공개	법안 초안 공개	영국 국세청(HMRC)은 요건을 충족한 대여·차입·자동시장조성 거래에서 과세상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 실제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미루며 2027년 4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
	2026.07.16	영국 재무부, 디지털 국채(DIGIT) 파일럿 추진계획 공개	추진계획 공개	영국 재무부는 2026년 2월 선택한 발행 플랫폼 HSBC Orion을 통해 2027년 1분기 첫 디지털 국채를 발행할 계획. HSBC와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은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양사 디지털증권예약기관을 연결할 예정
일본	2026.07.15	금융상품거래법·자금결제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안 성립	암호자산과 암호자산교환업 관련 규제를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 옮기고, 발행자 공시와 거래업자·수탁업자 의무, 불공정거래 규제를 정비
	2026.07.21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6	각의 결정	토근화예금과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상거래·물류 데이터와 연계하는 은행권 금융서비스를 국가 추진과제로 제시. 제조업 발주·수주와 납품 대금 결제, 무역서류 관리, 증권결제를 활용 분야로 예시
한국	2026.07.14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정부 발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원과 Bitcoin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 블록체인 기반 국채 토근화 실증도 과제에 포함
	2026.07.15	혁신금융서비스 5건 신규 지정·7건 지정 내용 변경	금융위원회 의결	프로젝트 한강 2단계, 방한 외국인 대상 선불지급수단, 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대출 등 5건을 신규 지정. 기존 7개 은행의 예금토근 서비스는 2단계 실증계획에 맞춰 지정 내용을 변경
	2026.07.30	프로젝트 아고라 실거래 테스트(real value testing, RVT) 참여 결과	실증 결과 발표	토근화 중앙은행 지급준비금과 상업은행 예금을 이용해 국경 간 지급결제를 실제 자금으로 시험. 프로젝트 한강과 아고라 플랫폼의 연계·상호운용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 미국: 상원, 클래리티 법안 상원 수정안 공개

클래리티 법안 수정안 공개

미 상원은 클래리티 법안 수정안(amendment in the nature of a substitute)을 공개했다. 법안은 ▲은행위 소관(Division A) ▲농업위 소관(Division B) ▲윤리 규정(Division C) ▲시행일(Division D)의 4개 편제로 구성됐다. Division A의 증권 규제 부분에는 'Lummis-Gillibrand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of 2026'이라는 별도 약칭이 부여돼 기존 루미스-질리브랜드 법안의 주요 내용을 통합했음을 시사했다.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자산 분류 체계다. 하원안이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과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mature blockchain system)'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산을 디지털상품으로 인정하는 구조였다면, 상원안은 '네트워크 토큰(network token)'과 '부수자산(ancillary asset)'이라는 새로운 이원 체계를 도입했다. 특히 토큰이 지분, 부채, 배당청구권, 청산권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의 권리(disqualifying financial rights)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했으며,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네트워크 토큰으로 인정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거버넌스 권한이나 프로토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만으로는 이러한 금융상품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며, DAO도 하나의 법인이나 공동지배 집단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 규정을 신설해 DeFi 프로젝트의 법적 불확실성을 일부 완화했다.

자금조달과 공시 측면에서는 SEC에 'Regulation Crypto' 제정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하의 부수자산 발행에는 등록 면제를 허용하되 반기 공시를 의무화하고, 발행자의 기업가적·경영적 노력이 더 이상 토큰 가치의 핵심 요소가 아니라는 인증(certification)을 제출한 뒤 SEC가 60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공시 의무가 종료되는 구조를 도입했다. 기존 발행 토큰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소급 공시 범위는 최근 3년으로 제한했다.

시장 측면에서는 네 가지 변화가 주목된다. 첫째, 2026년 1월 1일 기준 현물 ETP의 기초자산이었던 토큰은 부수자산이나 증권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해 이미 상장된 주요 자산의 법적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했다. 둘째, 디지털자산 서비스제공자의 스테이블코인 예치 기반 이자·수익 지급을 금지하고 거래·결제 등 실질적 활동에 따른 리워드만 허용해 거래소 리워드 서비스의 구조 변경 가능성을 열었다. 셋째, 토큰화 증권은 기초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규제 동등성(regulatory parity) 원칙을 명문화했다. 넷째, 디지털상품 거래소 등 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CFTC의 배타적 관할을 인정하면서도 주정부의 사기·불공정거래 집행권은 유지했다.

이번 수정안은 하원안을 단순 보완한 수준이 아니라 디지털자산의 법적 분류체계와 SEC-CFTC 관할 기준을 전면 재설계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발행·후원을 제한하는 윤리 규정과 일부 관할 조항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어 최종 법안은 추가 수정 가능성이 있다. 상원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하원안과의 조율(Conference) 절차를 거쳐 최종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유럽: ECB, 디지털 유로 시범사업 참여사 36 곳 선정

디지털 유로, 민간 PSP 참여
기반 파일럿 본격 추진

ECB는 2026년 7월 14일 유로존 전역에서 36개 결제서비스제공자(PSP)를 디지털 유로 파일럿 참여사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2026년 3월 참여의향 공모 이후 50건 이상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사전에 공표한 적격성 기준에 따라 은행과 비은행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모델과 규모의 사업자가 선정됐다. 파일럿은 2027년 하반기부터 12개월간 ECB와 벨기에·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 등 유로시스템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실시하며, 선정된 PSP는 자국뿐 아니라 다른 유로존 국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파일럿은 ‘디지털 유로 베타’ 버전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입법안에서 제시한 디지털 유로와 기능과 기술 구조는 유사하지만 법정통화 지위는 부여되지 않는다. 참여사는 이용자의 계정 개설과 결제를 지원하는 유통(distributing) PSP와 가맹점 결제를 담당하는 매입(acquiring) PSP로 구분되며 일부 사업자는 두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테스트 범위는 개인 간 송금(온라인·오프라인), 오프라인 및 Software POS 결제, 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등을 포함하며,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중앙은행 구내 식당·카페 등 다양한 가맹점 환경에서 실제 결제 흐름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편 디지털 유로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EU 이사회는 2025년 12월 협상지침(negotiating mandate)을 확정했으며,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ECON)는 2026년 6월 23일 입법안을 의결했다. 이후 유럽의회 본회의가 3자 협상 개시를 승인하면서 의회·이사회·집행위원회 간 협상이 진행 중이며, 현재 2026년 말 정치적 합의의 목표를 하고 있다. 입법이 예정대로 마무리될 경우 ECB는 2029년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유로를 발행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파일럿은 이러한 입법 절차와 병행해 추진되는 준비 단계로, 디지털 유로의 발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향후 실제 도입에 대비해 기술·운영 체계와 사용자 경험(UX)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번 발표는 디지털 유로의 기술적 검증을 넘어 향후 실제 도입 과정에서 민간 지급결제 사업자가 담당할 역할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실제 파일럿에 앞서 민간 PSP를 선정함으로써 제도 도입에 필요한 기술·운영 체계를 사전에 준비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 중앙은행이 발행·정산 인프라를 담당하고 민간 PSP가 이용자 계정·지갑, 고객관리 및 가맹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2계층(two-tier) 구조를 구체화하면서, 디지털 유로가 기존 금융·지급결제 사업자와의 역할 분담을 전제로 설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입법 절차와 기술·운영 준비를 병행하는 접근은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제 지급결제 환경에서의 검증을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향후 CBDC 도입 과정에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향후에는 2026년 말 입법 협상 결과와 2027년 하반기 파일럿을 통해 오프라인 결제, 민간 PSP의 역할 및 사용자 경험 등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3. 영국: 토큰화 로드맵 & 산업 태스크포스 출범

홀세일 금융시장 토큰화 로드맵

영국 재무부(HM Treasury)가 임명한 홀세일 디지털시장 총괄조정관(Wholesale Digital Markets Champion) 크리스 올라드(Chris Woolard CBE)는 2026년 7월 13일 재무장관에게 첫 번째 보고서인 「Forward Look for Tokenising UK Markets」를 제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발표된 「Wholesale Financial Markets Digital Strategy」의 후속 조치로, 영국 홀세일 금융시장의 토큰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산업 차원의 실행 로드맵과 향후 12개월간의 추진체계를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총 2회의 보고서가 예정돼 있으며, 두 번째 보고서는 실행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될 예정이다.

로드맵은 산업계 실행과제(Industry Actions)와 정부·감독당국 지원과제(Supporting Actions)를 구분해 10개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상용화 가능한 토큰화 시장 구축 ▲토큰화 담보 ▲토큰화 펀드시장 ▲홀세일 결제레일 ▲법적 불확실성 해소 ▲규제기준 ▲국내외 상호운용성 ▲금융범죄 컴플라이언스 및 디지털 신원 ▲기술중립적 과제 ▲복원력 강화로 구성된다. 특히 토큰 발행 자체보다 유통시장, 담보 활용, 결제 및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을 우선순위에 배치해 토큰화 시장의 전주기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에는 디지털 국채(DIGIT) 시범 발행을 2027년 1분기까지 실시하고 후속 발행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영란은행에는 DIGIT을 통화운영체계(Sterling Monetary Framework, SMF)의 적격담보로 수용하고, 중앙청산소(CCP)에서도 토큰화 담보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안했다. 산업계에는 DIGIT과 민간 발행자산을 활용해 레포(repo), 채권,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중심의 엔드투엔드 토큰화 거래를 구축하도록 권고했다.

법률·규제 측면에서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금융규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접근을 택했다. 보고서는 주식의 디지털 등록을 위한 법 개정, SMF 담보 적격성, 중앙예탁기관(CSD) 제도,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 규정의 기술중립성, 영국 건전성감독청(PRA)의 디지털자산 건전성 규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잔여 과제, 커스터디 정책 등을 주요 정비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는 토큰화 자산의 발행보다 담보 인정, 결제, 수탁, 자본규제 등 시장 인프라 전반의 법적 확실성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금융행위감독청(FCA)은 2026년 9월 30일부터 인가 신청을 접수해 2027년 10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54개사가 참여한 산업 태스크포스

로드맵과 함께 출범한 디지털마켓 챔피언 산업 태스크포스(Digital Markets Champion Industry Taskforce)에는 총 54개사가 참여한다. 참여 기관은 글로벌 은행(Barclays, HSBC, Citi, Goldman Sachs, J.P. Morgan, Morgan Stanley 등), 금융시장 인프라(LSEG·LCH, DTCC, Euroclear, Clearstream, ICE, Cboe 등), 자산운용사(BlackRock, Fidelity International, Schroders, Invesco 등), 유동성 공급자(Jane Street, Citadel Securities, Optiver, Wintermute 등), 디지털자산 기업(Coinbase, Circle, Ripple, Kraken, Ava Labs, Fireblocks, Digital Asset/Canton, Chainalysis 등)으로 구성된다. 전통 금융기관과 디지털자산 기업이 동일 협의체에서 토큰화 시장의 발행·유통·담보·결제·수탁 관련

표준과 실행 과제를 공동으로 설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운영체계는 총괄조정관이 이끄는 오케스트레이션 그룹(Orchestration Group, OG)과 9개 액션그룹(Action Group, AG)으로 구성된다. AG1~4는 발행·펀드, 유통시장, 담보 및 건전성 기준, 금융시장 인프라와 현금결제를 담당하며, AG5~8은 세제, 법률, 금융범죄 컴플라이언스·디지털 신원, 복원력 등 공통 과제를 지원한다. AG9은 영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홍보하고 관련 시장의 인식을 개선하는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맡는다. City of London Corporation이 사무국을 맡고 TheCityUK, Investment Association, UK Finance, Innovate Finance가 산업 파트너로 참여한다.

태스크포스가 향후 12개월간 우선 추진할 핵심 과제는 블록체인 기반 엔드투엔드 레포(repo) 거래 실증이다. 기존 개별 기관 간 양자간 거래를 넘어 발행, 담보관리, 수탁, 현금결제 및 금융시장 인프라가 함께 참여하는 전주기 거래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레포와 함께 채권 및 비청산 장외파생상품도 주요 실증 분야로 제시됐으나, 초기에는 담보 이동성과 유통시장 유동성 확대에 직접 연결되는 레포에 집중한다.

액션그룹 구성원과 의장, 세부 과업은 2026년 9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며, 보고서에 대한 산업계 의견은 2026년 9월 4일까지 접수한다. 두 번째 보고서는 향후 1년간 태스크포스와 정부·감독당국의 실행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4.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개정법 성립·공포

암호자산 규제의
금융상품거래법 이관

일본 참의원은 2026년 7월 15일 「금융상품거래법 및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가결·성립시켰으며, 동 법률은 7월 23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2월 금융심의회 「암호자산제도에 관한 워킹그룹」 보고서를 입법화한 것으로,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스타트업 자금조달 제도 개선 등과 함께 추진된 금융시장 제도개편 패키지의 일부다. 암호자산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되며, 무등록 영업 처벌 강화와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SEC)의 범칙조사 권한 부여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2026년 8월 12일부터 우선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암호자산을 기존 자금결제법상 지급수단 규율에서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 이관한 것이다. 종전 자금결제법상 암호자산 정의는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동하고, 자금결제법의 암호자산교환업 관련 규정은 삭제된다. 다만 암호자산을 유가증권으로 편입한 것은 아니며, 금융청은 암호자산을 유가증권과 구별되는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위치시키고 그 특성에 맞는 규제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거래법에는 암호자산 관련 별도 장이 신설되고, 암호자산거래업과 커스터디에 대해 금융투자업 수준의 영업행위 규제와 고객자산 분리관리, 선관주의의무 등이 적용된다.

공시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발행자가 존재하는 '특정암호자산'을 대상으로 모집·매출 시 사전 정보와 정가·수시 정보의 공표가 의무화되며, 발행자가 존재하지 않는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 암호자산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시 방식은 기존 증권 공시를 그대로 준용하지 않고 발행자의 정보공표 의무를 중심으로 설계됐으며, 기존 화이트페이퍼 중심의 정보공개 관행을 제도화하면서 허위공표에 대한 제재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불공정거래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특정암호자산 발행자의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뿐만 아니라 거래소의 상장·상장폐지 관련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도 내부자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시세조종과 사기적 거래행위에 금융상품거래법상 제재가 적용되며 과징금 부과 근거도 마련됐다. 처벌 수준 역시 금융상품거래법 체계에 맞춰 상향돼, 허위공표 등 주요 위반행위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00만엔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암호자산을 증권으로 포섭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 편입해 증권과 병렬적인 별도 금융상품으로 규율하는 새로운 접근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 한국: 금융위·한은, 예금토큰 실증 확대

예금토큰 실증 확대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신규 지정(누적 1,111건)하고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7건의 테스트 범위를 확대했다. 디지털자산 관련 사안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2단계)」로, 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를 신규 사업자로 지정하고, 기존 7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은행)은 2단계 테스트에 맞춰 기존 테스트 조건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참여 은행은 총 9개로 확대됐다.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이 2026년 3월 발표한 「프로젝트 한강 2단계」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2단계에서는 규모·기능·용처가 모두 확대됐다. 예금토큰 지급 수는 최대 10만 개에서 50만 개로, 보유한도는 지급당 100만원(누적 500만원)에서 1천만원(누적 1억원)으로 상향됐다. 기존 결제 기능에 지급 간 송금이 추가되고 자동 전환, 생체인증, 사업자 비대면 전자지갑,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이 도입됐으며, 기존 일반 결제와 디지털 바우처 외에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추가됐다.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지급방식에는 캐시백뿐 아니라 직접지급 방식도 허용되고 사용처 역시 소상공인과 대형사업체까지 확대됐다.

규제 측면에서는 기존 특례 체계가 유지됐다. 금융위는 은행법, 예금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대한 특례를 통해 예금토큰 발행을 은행 업무로 허용하고 예금자보호를 적용했으며, 예금토큰 원장을 개별 은행이 아닌 CBDC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발행량에는 예대율·LCR 등 기존 건전성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블록체인 기반 거래와 송금 기능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다.

[표2]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

구분	기업	서비스 및 의결 내용
신규 지정 (5 건)	오렌지스퀘어	무인환전기기와 앱을 연계해 방한 외국인에게 최대 100만 원 한도의 선불카드를 제공. 국내 휴대전화·외국인등록번호 기반 본인확인이 어려운 외국인의 현금 휴대·환전 부담을 완화
	네이버파이낸셜	국내 휴대전화·외국인등록번호 기반 본인확인이 어려운 방한 외국인도 최대 100만 원 한도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경남은행·아이엠뱅크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자로 신규 지정. 두 은행의 참여로 예금토큰 실증 참여은행은 9곳으로 확대
	카카오뱅크·부산은행	카카오뱅크의 낮은 자금조달 비용과 비대면 인프라, 부산은행의 기업심사 역량을 결합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을 공동 심사·취급
지정 내용 변경(7 건)	KB 국민·신한·우리·하나·NH 농협·BK 기업·부산은행	예금토큰 지급 수를 10만 개에서 50만 개로 확대. 지급당 보유한도는 100만 원(누적 500만 원)에서 1,000만 원(누적 1억 원)으로 상향. 개인 송금은 1회 100만 원·1일 500만 원, 법인 송금은 인터넷 기준 1회 10억 원·1일 50억 원, 모바일 기준 1회 1억 원·1일 5억 원까지 허용. 사용처 확대와 자동 입출금 전환·생체인증·국고금 집행·직접지급·현금영수증 기능도 추가

자료: 금융위원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국제 지급결제 연계 기반 검증

한국은행은 7월 30일 BIS 프로젝트 아고라(Project Agorá) 실거래 테스트(real value testing, RVT) 참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테스트에는 한국은행을 포함한 5개 중앙은행과 2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국내에서는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이 참여했다. 원화를 포함한 6개 통화를 대상으로 17개 시나리오, 총 30건의 거래가 수행됐고, 한국은행은 농협은행·신한은행과 함께 토큰화 지급준비금을 활용한 은행 간 원화 이체거래를 수행했다. 또한 한강 플랫폼과 한은금융망(BOK-Wire+)을 연계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향후 한강 플랫폼과 아고라 플랫폼 간 연계 및 상호호용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두 발표는 하나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금융위는 국내 예금토큰의 활용 범위를 결제에서 송금과 국고금 집행까지 확대하며 실증 범위를 넓혔고, 한국은행은 한강 플랫폼을 국제 지급결제 실험인 프로젝트 아고라와 연계하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국내 예금토큰 인프라가 향후 국가 간 지급결제 체계와 연계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현 단계는 규제 샌드박스 기반의 실증사업으로, 예금토큰의 법적 성격, 상시 서비스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 프로젝트 아고라의 상용화 일정은 모두 향후 정책 결정에 따라 구체화될 사항으로 판단된다.

[표3] 프로젝트 아고라 실거래 테스트(real value testing, RVT) 개요

구분	주요 내용
검증대상	운영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실제 자금으로 발행한 토큰화 지급준비금·은행예금의 실거래 활용 가능성을 검증
통화	원화·미 달러화·유로화·영국 파운드화·스위스 프랑화·엔화 등 총 6개 통화
참여기관	프랑스 중앙은행·일본은행·한국은행·스위스 국립은행·영란은행 등 5개 중앙은행과 국내외 금융기관 22 곳, 운영 총괄기관 SIX(Swiss Infrastructure and Exchange)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 Kaleido는 기술 제공사로 참여
활용사례	서로 다른 통화를 이용한 기업·은행의 국경 간 지급, 은행 간 외환동시결제(Payment versus Payment, PVP), 기업·은행·동일 금융그룹 내 단일통화 지급
거래 시나리오	이중통화 거래 2개, 외환동시결제 2개, 단일통화 거래 13개 등 17개 시나리오에서 총 30건을 수행
거래금액	총 거래금액은 약 80만 스위스 프랑, 건당 9,000~12만 5,000 스위스 프랑. 원화 거래는 총 1억 2,000만 원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II

Key Issue

1. SEC 헤스터 퍼스, 볼트 대출 증권법 적용 가능성 제시

온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권법이 사라지지 않는다

2026년 7월 22일 SEC 헤스터 퍼스(Hester M. Peirce) 위원은 「Headstands and Summervaults: A Statement on Crypto Vaults and Lending Strategies」를 발표하며, 볼트(Vault)와 온체인 대출 서비스에도 기존 연방 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퍼스 위원은 온체인으로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권법 적용 대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과도한 해석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5년 토큰 증권에 관한 성명에서 제시한 '토큰화된 증권도 여전히 증권'이라는 원칙을 볼트와 온체인 대출 서비스까지 확장한 것이다.

성명은 볼트를 단일 상품이 아니라 운용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 스펙트럼으로 설명했다. 한쪽에는 배포 이후 사람의 개입 없이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산을 자동 배분하는 불변(immutable)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구조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운영자나 큐레이터가 수익 전략과 자산 배분을 직접 결정하는 구조가 존재한다. SEC는 이처럼 운용 재량(discretion)의 존재 여부를 증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제시했으며, 수익 전략 선정, 자산 재배포, 운용 주체 선정 등의 행위를 주요 검토 대상으로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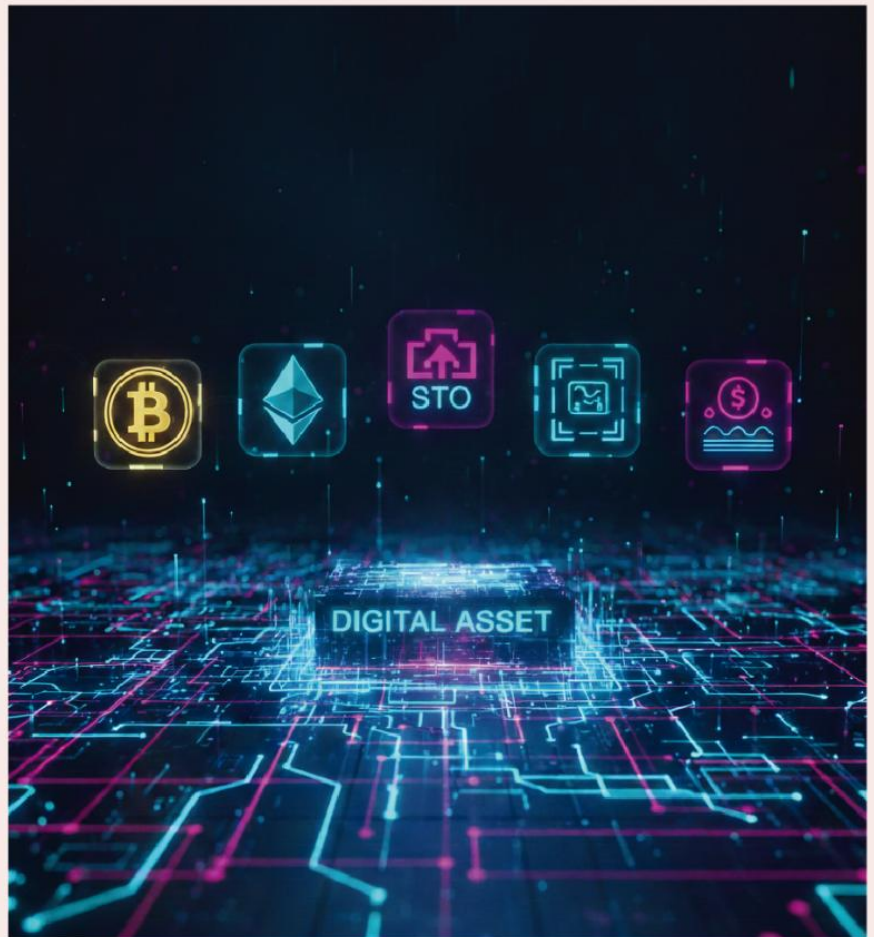
또한 볼트와 온체인 대출은 투자계약(Howey),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채무증권(Reves Test), 투자자문업 규제 등 다양한 연방 증권법 체계와 접점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리 결정, 편입 자산 선정, 담보인정비율(LTV), 청산 기준 등 대출 운용의 핵심 파라미터를 관리하는 행위 역시 증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볼트와 온체인 대출의 법적 성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돼야 하며, SEC의 분석은 의회가 부여한 관할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개발자의 표현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rule)이 아니라 개별 위원의 정책 성명으로, 향후 SEC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참고 자료로 평가된다.

2. 전망

규제 초점이 프로토콜에서
운용 주체와 운용 방식으로
이동

이번 성명은 프로토콜의 탈중앙성 여부보다 누가 투자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수익 창출 전략을 운용하는지를 증권법 적용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을 수행하는 큐레이터 등 운용 레이어가 향후 규제 논의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거래소 Earn 서비스나 기관 대상 온체인 자산운용 등 CeFi와 DeFi를 연결하는 수익형 서비스에서도 운용 구조와 책임 주체를 보다 명확히 설계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성명은 최근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 법안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제 논의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단순히 누가 이자를 지급하는지뿐 아니라 수익이 어떠한 운용 구조를 통해 창출되는지까지 함께 심사하는 규제 체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제도화 여부는 클래리티 법안 입법 경과와 SEC의 규칙 제정, 개별 사안에 대한 집행 사례 등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III

8월 주요 일정

[표4] 8월 디지털자산 정책 일정

국가	날짜	정책 및 법안	내용
미국	2026.08.08	클래리티 법안 상원 심의 절차 개시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클래리티 법안(H.R. 3633) 심의개시동의(motion to proceed)와 이에 대한 토론종결동의(cloture)를 제출. 표결일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원은 9월 14일 본회의 일정을 재개. 클래리티 법안 절차표결은 9월 15일 예정
	2026.08.17	SEC, Reg NMS 제안 의견수렴 마감	주문보호규칙(Rule 611)과 잠금 교차호가 금지 규정(Rule 610(e)) 폐지안 의견수렴 종료
EU	2026.09.30	MiCA 재검토 의견수렴 마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MiCA의 시행 현황과 제도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공개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을 종료할 예정. 8월 31일이던 마감일을 9월 30일로 1개월 연장
한국	2026.08.03	2026년 세계개편안 발표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과세는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가상자산 관련 세계개편안은 상속증여세 조사 시 가상자산사업자 자료 확보 근거와 해외금융계좌 명단공개 기준 강화
	2026.08.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 시행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대상을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등을 신고 불수리 요건에 추가. 신고 수리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제재를 앞두고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재 내용을 원 소속 회사에 통보해 기록으로 남기는 근거 신설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 주요 이슈 전망: 국내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전제로 보완 논의 본격화

정부는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소득과세 추가 유예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과세는 예정대로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전제로 입법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2022년 이후 세 차례 연기됐던 과세 제도가 추가 유예 없이 유지되면서 시장의 관심도 '시행 여부'에서 '세부 제도 설계'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이번 개편안의 특징은 소득세율 조정보다 과세 인프라 정비에 초점을 맞춘 점이다. 상속·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금융재산 일괄조회 및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이 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되며, 개정 이유로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자료 수집'으로 명시됐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기준도 강화돼, 이미 신고 대상에 포함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계정 및 셀프커스터디 지갑에 대한 과세 집행 기반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향후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거래 유형별 취득가액 산정과 세부 과세기준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표5] 2026년 세제개편안과 2027년 시행 예정 가상자산 소득 과세제도

구분	항목	주요 내용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과세 일정·세율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추가 유예나 시행일·세율 기본공제 조정안을 담지 않음. 별도 법 개정이 없으면 현행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상속·증여재산 조회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 2027년 1월 1일 이후 일괄조회분부터 적용하는 안을 제시
	상속·증여세 조사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 2027년 1월 1일 이후 질문·조사분부터 적용하는 안을 제시
	해외금융계좌 제재	신고 누락·과소신고자의 명단 공개 기준을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강화. 해외금융계좌 전반에 적용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하는 안을 제시. 5억 원 신고기준과 50억 원 초과 형사처벌 기준은 이번 개편안에서 조정하지 않음
2027년 시행 예정 가상자산 소득 과세제도	시행·신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 2027년 소득은 2028년 5월에 처음 신고·납부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팔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얻은 이익과 가상자산 대여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단순 보유에 따른 평가이익과 대여 원금 반환분은 과세소득에서 제외
	교환거래 계산	가상자산 간 교환소득은 기축가상자산(BTC·ETH·USDT 마켓 등) 가액에 교환비용을 적용해 계산. 기축가상자산 가액은 교환 시점에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외국통화 연동형은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기타 수익	거래소 예치, 스테이킹·에어드롭·채굴·탈중앙화금융(DeFi) 수익은 계약과 지급 방식에 따라 소득 분류와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과세당국의 후속 안내를 확인할 필요
	소득금액	양도·교환 대가와 대여 대가를 합산한 뒤 양도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
	기본공제·세율	연간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소득세 20% 적용.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22%
	취득가액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가상자산주소별로 산정.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동평균법, 그 외의 경우는 선입선출법을 적용. 총평균법은 법인의 가상자산 평가방법에 해당하며 개인 소득세에는 적용하지 않음
	시행 전 보유분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이때 시가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으로 산정하며, 해당 사업자가 취급하지 않는 가상자산은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가 같은 시점에 공시한 가격을 적용
	취득가액 확인 곤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취득해 증빙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종류 가상자산 총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로 인정. 이 경우 부대비용은 별도로 공제하지 않음
	손익통산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대여 이익과 손실은 합산하되,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하지 않음
	해외계좌·개인지갑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기준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신고. 해외 거래소 계정은 신고 대상이며, 본인이 개인키를 관리하는 지갑은 제외. 다만 개인 지갑의 매매 차익은 소득세 신고 대상. 본인 명의의 지갑·계좌 사이의 이동은 양도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 아님
	신고 준비	신고 준비를 위해 국내외 거래소의 매매·교환 수수료 내역, 개인지갑 입출금 기록·지갑 주소, 스테이킹·에어드롭·DeFi 내역과 2026년 말 보유 수량·시가를 미리 정리

자료: 국세청, 재정경제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주요 이슈 전망: 해외

미 상원 8월 휴회…
클래리티 법안, 연내 입법
여건 더욱 제한

클래리티 법안의 연내 처리 여부를 가를 관건은 향후 입법 일정과 양당 협상이다. 존 튼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8월 8일 오전 4시 52분(미국 동부시간 기준), 클래리티 법안의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동의안(motion to proceed)에 대해 토론종결(cloture)을 공식 신청했다. 상원은 이후 산회했으며, 이 기간에는 일부 임시회의(pro forma session)만 열린다. 클래리티 법안 심의를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토론종결 표결은 9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미 상원에서는 토론종결에 통상 60표가 필요한 만큼 공화당 단독으로는 처리가 어렵고 민주당의 추가 지지가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윤리 조항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등에 대한 추가 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9월 표결 전까지 양당 협상 결과가 주요 변수다.

휴회 이후에도 입법 환경은 녹록치 않다. 상원은 9월 14일 회기를 재개하지만, 10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다시 지역구 활동기간이 예정돼 있어 9월 회기 자체가 제한적이다. 여기에 2027회계연도(FY2027) 세출법안 처리 등 주요 예산 현안이 우선순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클래리티 법안에 배정할 본회의 일정은 더욱 제한될 수 있다. 연내 처리를 추진할 경우에는 11월 중간선거 이후부터 연말까지의 회기가 사실상 마지막 입법 창구가 될 가능성이 크며, 상원 통과 이후에도 이미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의 조정 또는 하원의 재의결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

향후 시장의 관심은 연내 통과 여부와 함께 본회의 협상 과정에서 윤리 조항과 BRCA 등 핵심 조항이 어떤 형태로 조정·확정되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클래리티 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니어스법 후속 규정과 SEC-CFTC의 규칙 제정, 해석지침 등 감독당국의 후속 조치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클래리티 법안이 연내 처리되더라도 대부분의 핵심 제도는 2027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단기 시장구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표6] 2026년 미국 상원 회기 일정

기간	상원 회기 일정
2026.08.03~2026.08.07	상원 회기
2026.08.10~2026.09.11	지역구 활동기간
2026.09.14~2026.10.02	상원 회기 (9월 21일 제외)
2026.10.05~2026.11.06	지역구 활동기간
2026.11.09~2026.11.20	상원 회기 (11월 11일~13일 제외)
2026.11.23~2026.11.27	지역구 활동기간
2026.11.30~2026.12.18	상원 회기
2026.12.21~2026.12.31	지역구 활동기간

자료: 미국 상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6년 8월 11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윤영)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지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6년 6월 30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96.3%	3.7%	0.0%	100.0%